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
행정안전부	2019년 10월 16일(수) 조간 (10. 15. 15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이정민 사무관 구은정
		연락처	02-2100-4058 02-2100-4061

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... 1,109명이 새번호 받아

-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, 「주민등록번호 변경, 2년의 기록」 발간

□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,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**1,109명**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**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**(위원장 홍준형, 이하 '변경위원회')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,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,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.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인 안건이다.

○ 의결 결과 1,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. 또,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,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.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,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.

○ 1,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,265건으로 가장 많았다.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**보이스피싱**이 489건, 신분도용 420건, 해킹과 스미싱(무료쿠폰, 초대장 등의 문자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당 인터넷주소 클릭시 소액 결제 피해 또는 개인정보를 빼어가는 행위)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.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**가정폭력**이 280건, 데이트폭력 등 상해·협박이 158건, 성폭력 55건, 기타 70건 등이다.

○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, 서울 446건, 부산 119건 순이었다.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.

□ 주민등록번호 **변경제도**는 **주민등록번호 유출**로 **생명·신체, 재산 등**의 피해를 입거나, 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.

○ **변경위원회**는 **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**을 **심사·의결**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.

□ 한편, **변경위원회**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「**(백서) 주민등록번호 변경, 2년의 기록(2017. 5~2019. 9)**」을 발간했다.

○ 백서에는 **주민등록법 국회 통과** 시점(2016. 5)부터 **주민등록번호변경 제도추진단**(2016. 5~2017. 5), **변경위원회** 출범 및 운영까지(2017. 5~2019. 9)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.

○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, 위원회의 심의 과정 등이 담당공무원의 **생생한 인터뷰**, 각종 **사진** 및 **도표**를 통해 **입체적**으로 보여준다.

□ **홍준형 위원장**은 "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**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**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" 이라며, "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말했다.

○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(www.mois.go.kr)와 위원회(www.rrncc.go.kr)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.

참고 1 「(백서) 주민등록번호 변경, 2년의 기록」 표지

www.rrncc.go.kr

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, 2년의 기록

(2017.5. ~ 2019.9.)



행정안전부
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

참고 2 「(백서) 주민등록번호 변경, 2년의 기록」 목차

구성	목차
총론	1.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배경 2. 그간의 추진경과 3.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개념 4.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
주민등록 번호 변경제도의 탄생	1. 추진배경 2. 정부의 대책 강구 3. 학계의 논의 4.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 5. 국회심의 결과 6.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의결
법령정비 및 추진기반 구축	1. 관련 법령 정비 2. 변경제도 세부운영방안 마련 3.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발족 및 활동 4.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설치 5. 사무국 설치 6. 소요예산 확보 7. 제도 홍보·교육
주민등록 번호변경 위원회 제1기 출범	1. 출범식 2.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요내용 3.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및 개최 4.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개선 및 시행 5.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홍보 6.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개발·운영
주민등록 번호변경 위원회 제2기 출범	1. 출범배경 2. 구성방안 3. 출범식 4. 위원회 운영 5. 워크숍 6. 발전적 운영방안
부 록	1.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명단 2.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명단 3.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의결현황 4.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관련 주민등록법령 5. 행정안전부 연혁

참고 3 | **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현황**

□ 추진배경 및 경과

○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위해 변경제도 도입, 주민등록법 개정('16.5.29.), 시행*('17.5.30.)

※ 헌재, "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" 결정('15.12.)

*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(위원장 포함 11명[민간6, 정부5], 1사무국 1과 13명)

□ 주요내용

○ (요건) ▸주민등록번호 유출*로 인한 생명·신체·재산 피해(우려)자, ▸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(우려)자 (주민등록법 제7조의4)

* 유출 : 정보주체나 정보처리자의 관리·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(대법원 판례,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)

○ (내용)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(6), 성별(1)을 제외한 지역번호(4), 등록순서(1), 검증번호(1) 변경



○ (절차)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→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·의결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변경(법정처리기한: 6개월)

○ (기존 번호와의 연계) ▸복지, 세금, 건강보험 등의 행정(공공)기관*은 자동변경, ▸은행·보험·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

* 국세청(납세자관리), 행안부(지방세), 경찰청(신원조회) 등 17개 기관 연계처리

□ 추진 실적

○ 정례회의(56회, 매월 2회)를 통해 총 1,828건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해 1,598건(접수건의 87.4%) 심사·의결 완료 ('19.10.11 기준)

- 인용 1,109건(69.4%), 기각 469건(29.3%), 각하 20건(1.3%)

참고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의결현황

□ 신청 현황

○ 신청현황 : 1,828건

< '17.06.01.~'19.10.11. >

신청사유	총계	재산	생명·신체
신청건(계)	1,828	1,265	563
비 중(%)	100	69.2	30.8

○ 사유별 신청현황

< '17.06.01.~'19.10.11. >

합계	재산(1,265)			생명·신체(563)			
	보이스피싱	신분도용	기타*	가정폭력	상해·협박 (데이트폭력등)	성폭력	기타**
1,828 (부분비중%)	489 (38.7)	420 (33.2)	356 (28.1)	280 (49.7)	158 (28.1)	55 (9.8)	70 (12.4)
전체비중%	26.8	23.0	19.5	15.3	8.6	3.0	3.8

* 스미싱, 해킹, 등 / ** 명예훼손, 학교폭력 등 ※ 취하 : 108건, 이의신청 : 34건

○ 시·도별 신청현황

< '17.06.01.~'19.10.11. >

합계	소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
1,828	905	446	119	92	112	45	50	26	15	
	소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	923	451	55	50	87	46	34	76	103	21

□ 위원회 의결 현황

○ 의결현황 : 1,598건

< '17.06.01.~'19.10.11. >

의 결	총계	인용	기각	각하
의결건(계)	1,598	1,109	469	20
비 중(%)	100	69.4	29.3	1.3

○ 유형별 결정현황

합계 (1,598)		재 산				생명·신체				
		소계	보이스피싱	신분도용	기타*	소계	가정폭력	상해·협박 (데이트폭력등)	성폭력	기타**
		1,099	418	391	290	499	240	143	47	69
인용 (비중(%))	1,109 (69.4)	684 (61.7)	357 (52.2)	286 (41.8)	41 (6.0)	425 (38.3)	232 (54.6)	129 (30.4)	44 (10.3)	20 (4.7)
기각	469	399	58	102	239	70	7	13	3	47
각하	20	16	3	3	10	4	1	1	-	2

* 카드3사 등 개인정보유출, 스미싱, 해킹, 사기, 분실(도난) 등
** 명예훼손, 학교폭력 등

○ 성별 결정 현황

심의결과	계	남성	여성
의 결(건)	1,598	651	947
%	100	40.7	59.3